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서 수입 의존도 높은 밀·콩 등 재배

농식품부, 농생명용지 내 시범운영 공개추첨 통해 3개 농업법인 선정 청년농 등 정밀농업 접목 유도 계획 밥쌀 재배 금지... 가루쌀 등 도입



전북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7-1공구 임대구역 /농식품부

전북 새만금 내 농생명용지에 대규모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가 들어선다. 정부는 이곳을 밀 등 그간 수입에 크게 의존해 온 기초 식량작물의 특화 재배 단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식량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식품원료를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새만금농생명용지 7-1공구에 대규모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기술 수용성이 높은 청년농 등 농업법인이 데이터 기반 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을 접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옥수수 등 기초 식량작물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특화단지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는 499(499만m²)를 100ha 이상의 3개 구역으로 나눠 규모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사업지역인 군산시·김제시·부안군에 있는 농업법인에 최장 10년간 임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대상자는 내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의 공모를 통해 농업법인이 제안하는 사업계획서를 전문가가 평가한다. 이어 고득점자순으로 2배수를 선발한 뒤 공개추첨을 거쳐 최종적으로 3개 농업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영농은 임대차계약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작하게 된다. 농어촌공사는 공모에 앞서 이번 달에 공모계획 사전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같은 새만금농생명용지 이용 계획은 수요가 크게 줄어든 밥쌀 대신 타 작물을 키운다는 정책 목표와 맞닿아 있다.

앞서 지난 9월 농식품부는 새만금을 포함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을 고시하고 ‘농어업의 미래 성장산업 전진기지화’를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라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019년도의 1차 계획 이후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올해 2차 계획을 세웠다.

농식품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임대간척지 내 일반벼의 재배면적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 오는 2030년까지 모조리 폐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농업인 등이 신규로 임대할 시 밥쌀 재배가 금지되며 대신 가루쌀 등의 타 작물을 도입해야 한다. 또 간척지내 스마트팜을 비롯해 첨단농업연구, 육종 등의 활용을 확대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및 전남 영산강 등 대규모 간척지의 경우, 향후 법인당 임대 규모를 20ha 이상에서 50ha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환경부,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논의

‘기후미래포럼’ 첫 번째 회의

환경부는 오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기후미래포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월 29일 기후위기 헌법소원 결정의 후속조치로, 각계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논의한다. 다양한 장기 감축경로를 마련하고 부문별 감축 수단과 사회·경제적 영향도 검토해 입법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5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

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 경제, 과학기술, 법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전문가들과 미래세대, 산업계, 시민사회,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포럼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환경연구원의 포럼 운영 계획 발표 후,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감축 경로 수립 방향, 분과별 역할, 추진 일정 등 포럼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포럼에서 도출된 입법대안을 내년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기후미래포럼의 논의가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에 초석이 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인 탄소 감축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코트라, 인도시장 수출기업 애로사항 청취

강경성 사장, 이랑텍 방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강경성 사장이 지난 13일 글로벌 사우스 주요 국가인 인도에 5G 통신장비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을 방문해 기업 애로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강 사장이 방문한 경기도 동탄 소재 이랑텍은 2017년 설립했으며, 기지국 핵심부품인 상호간섭제거 필터와 5G RF(Radio Frequency) 필터를 개발해 국산화된 기업이다. 2022년 코트라 지사와 사업에 참가하며 인도 시장에 진출했으며 현재는 현지 기업과 합작회사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복 이랑텍 대표는 인도시장에 대해 “향후 통신장비시장에서 빅마켓이 될 중요한 곳”이라며 코트라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강경성 사장은 “이랑텍이 인도 시장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으며 애로사항이 있을 때마다 즉시 알려달라”고 했다.

인도 경제는 매우 빠르게 성장중이며 향후 5년 내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의 협력은 제조업 투자에서 반도체, 인공지



강경성 코트라 사장이 지난 13일 경기도 동탄 소재 통신장비 부품 수출기업 이랑텍을 방문해 이재복 대표와 인도 및 글로벌 사우스 진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코트라

능, 우주항공, 제약 등 신흥 첨단기술로 확대중이다.

우리 주요 기업들은 인도에서 이미 친숙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며 무역과 투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정 협상도 진행중이다.

강 사장은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국가인 인도시장 수출현장 점검을 위해 이랑텍을 방문하게 됐다”며 “새로운 기회 요인이 우리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해 코트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업부, EU에 탄소국경조정제도 우려 전달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 역외 기업에 차별 적용 않도록 요청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측에 2026년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산업부는 안 장관이 유럽연합 신집행위원회 출범 계기, 호스트라(Wopke Hoekstra) 기후·넷제로·청정성장 집행위원회에 보낸 취임 축하 서한에 이같은 우려사항을 담아 송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안 장관은 서한을 통해 2026년 1월 본격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 제도 도입 초기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통상규범에 입각해 역외 기업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협조를

산업부 관계자는 “고위급 면담과 정부입장서 제출 등 우리 의견을 지속 개진해 온 결과, 기업의 민감정보 보호 및

생산공정별 배출량 산정방식 등 우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 “최근 발표된 이행법안에도, 우리측 요청이 반영돼 수출기업이 유럽연합 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등록부에 직접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돼,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업 민감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유럽연합의 탄소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노력을 지속 증진할 예정”이라며 “유럽연합의 탄소규제 대응 관련 협의를 진행해온 여러 유사입장국과 공동대응을 강화해 글로벌 협상력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고용부,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가사 모집

내달 3일까지 대·중소기업 신청 받아

고용노동부는 내달 3일까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에 참여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

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분야에서 협력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며, 우수한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함으로써 산업재

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환경을 조성한다.

대기업에서는 재원을 마련해 중소기업에 컨설팅, 교육, 보호구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기술·재정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노력을 뒷받침한다. 올해에는 대기업 228개소, 사내·외 협력업체와 지역중소기업 3209개소가 참여해 안전을 위한 공정 개선 등 상생협력 활동을 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민물해면 공생 희귀 방선균서 항암효과 발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 신규물질 발견 후 후속 연구 수행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민물해면과 공생하는 희귀 방선균에서 항암 효과와 항염증 효과를 동시에 가진 신규 물질을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민물해면은 바다에 서식하던 해면류가 민물 환경에 적응한 종으로, 수심 2~5m에 있는 나뭇가지, 물풀, 자갈 등 다양한 물체 위에 서식하며, 약 150종이 극지를 제외한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19년부터 담수 환경에서 희귀 방선균과 이들이 생산하는 유용 물질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에는 희귀 방선균에서 신규 물질을 발견하고 이를 화학적으로 합성한 뒤, 항암 및 항염증 작용 기작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방선균은 항생제 등 유용 물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세균으로, 특히 자연에서 발견이 어려운 스트렙토마이세스(Streptomyces) 속의 방선균은 ‘희귀 방선균’으로 분류된다. /세종=김대환 기자